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우리는 어쩌다 '기후 악당'이 되었나

부상한 것이다. 그레 광주를 아프리카에 빚대 '광프리카'라고들 하는 것일 게다. 과연 그럴 만하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혈떡인다'는 속담처럼 날 더위도 주체할 수 없는데, 밤이 되어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니 당해 널 재간이 없다. 급기야 정부는 2년 전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폭염은 몰라서 그렇지 기상 재해 중에서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재앙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160명이었다. 여기에 인구통계상 그해 폭염이 절정을 이룬 7-8월의 '초과 사망자'는 7000명을 넘겼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였던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최고

기상학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 주변은 이산화탄소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는 또한 극심한 폭염·한파·홍수·태풍·폭우·폭설·가뭄 등의 이상 기후, 그리고 대기오염 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19세기 말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 이상 증가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가량 올랐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이다. 게다가 기온 상승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뜨거워지는 지구를 방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상승할 경우 10억~2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3도가 오르면 생명체 대부분이 당해 널 재간이 없다. 급기야 정부는 2년 전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폭염은 몰라서 그렇지 기상 재해 중에서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재앙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160명이었다. 여기에 인구통계상 그해 폭염이 절정을 이룬 7-8월의 '초과 사망자'는 7000명을 넘겼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였던 셈이다.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환경부가 집계한 2017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인 7억 914만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배출량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40.8%로 OECD 국가 평균(2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기후 정책도 국제 기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지난해 말 국제민간단체가 평가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순위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8위였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 뉴딜'도 속된 강경이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올해는 폭염에 코로나19의 대유행까지 겹쳤다. '이중 재

난'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도 기후 변화와 밀접하다고 보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산림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 등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가족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영화 '컨테이션'의 말미에서 보여 준 바이러스 전파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반면 기후 변화는 인류와 생명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지구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반가운 것은 '폭염 도시'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실현과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 정책보다 훨씬 앞선 것이지만 예산과 시민 참여 등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폭염·감염병 부르는 온난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 이어 최근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G7 회의를 초청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컸다. 따라서 K방역 성공에 안주할 게 아니라 공존의 지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와 석탄 발전의 조기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명확한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서둘러 제시하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가 끝내 '기후 악당'으로 남을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탄소 선도 국가가 될 것인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은펜칼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하는 메시지

나 성별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도 구별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감염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 팬데믹'이라 부른다.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비대면·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재택 근무의 증가,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사회적 거리 두기, 인터넷을 통한 생필품 주문 등 그 변화는 다양하다. 이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IT) 기술과 촘촘한 배달망 덕이다. 저녁에 물품을 주문하면 아침이면 현관 앞까지 배달해주는 '총알 배송'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코로나 공습 이후 미국에서는 화장실 용 두루마리 휴지 백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마트에서 뒤엉켜 쟁탈전을 벌이고, 진열대가 텅 빈 정도로 싹쓸이하는 장면은 우리와 거리가 먼 낯선 모습으로 보였다. 세계적 군사력 강대국들의 코로나 피해가 더 심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 국가의 열악한 건강보험은 막

대한 군사비 지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극이차 개방 사회로 알려진 유럽의 속사정도 들여다보면 그들 내부에 인종, 종교, 이민, 난민 등 이질적 집단을 차별하는 제도적 간막이가 쳐져 있다. 사회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공존·공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중 보건과 공공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의 중요한 조건이다. '요양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미국을 비롯한 소위 의료 선진국들이 암울한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게 분명해 보인다.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문제라는 점에서 총체적 변동의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해 과거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겁 없이 날뛰던 인간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위기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에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만큼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불안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예방의 길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이웃 간 '단절'로 인한 낙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이제 감염병은 모두의 문제이며 어느 한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지구촌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경 차단만이 능사가 아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는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자도생의 길로 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송민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세상살이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뒤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인파로 붐비던 거리가 한산하다. '풍나물 교실'과 '만원 버스'는 자취를 감추었다. 강의를 비롯한 필자의 공적인 활동도 대부분 끊겼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던 해외 여행도 코로나 사태 이후 멀어지게 되었다. 이제 여행은 아름다운 경치나 야외 활동보다 인파를 피해 호젓한 곳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이 일반화되었다. 여행객들의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켜 버렸다.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세계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종이

남광주 변전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구정에서 이권이 수반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공공 복리에 적합한 토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변전소 빈 공간 토지에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조성해 편안하고 청량함을 주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진월동에는 지난 60년대 맨 처음 변전소가 들어서고, 이를 기존 삼아 광주시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 의거해 주변에 아파트촌이 형성되었다. 이후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원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첨단 육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기능을 옮겨 활용하기도 20년이 넘는다. 따라서 현재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일상생활, 기본권 침해

는 물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 변경 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기후 온난화, 폭염 등에 대응한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정책은 없고 아파트 건립을 토지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고시까지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지 궁금하며, 해당 지역의 생활권자인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였는지도 의문이다. 주민들은 사전 공고나 알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때문이다.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줄곧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 권익위원회(회장 최영태·전 남대학교 교수) 주관으로 2019년 2월

19일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 소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당시 광주 남구청 담당자, 한전 관계자,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논의한 바 한전 변전소가 당초 토지 취득 목적대로 타 장소로 이전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만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광주변전소 빈 공간 토지에는 공공성을 우선해 생활권자인 주민이 제한한 대로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에 걸맞게 변전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넓게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와 해당 구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상기했으면 한다.

社說

거세지는 '코로나 고용 한파' 대책은 있나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지역 고용 시장을 강타하면서 실업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289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79억 원에 비해 32.6% 급증한 것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올 상반기 3만 9486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 3552명) 대비 17.7% 늘었다. 특히 청년 실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20대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60대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급여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 중 60대가 4664명으로 전년보다 30.4%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는 19.6%

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고용 한파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다. 한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제 올 하반기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 5.1%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실질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은 생계마저 위협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 유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집단 해고를 막고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도 실직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외제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 제도 개선해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엇나가고 있다. 충전 요금에 대거 오른 데다 전기차에 적용됐던 충전 요금 특례 할인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게 인기를 끌었던 전기차 구매 의욕도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광주 지역의 전기 충전소 설치 대수는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에 일률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외제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5차(7월)로 광주시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 보면 총 11억6030만 원(84대) 중 67%인 7억8486만 원이 테슬라 차량(57대)의 보조금으로 교부됐다. 이는 미국산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 올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또 올 상반기 전기 승용차 보조금 900억 원을 쓸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모델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테슬라가 전기차 동차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테슬라는 작년 상반기 대비 1587.8% 성장하면서 전기 승용차 점유율도 43.3%로 늘어났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은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 시도가 크게 좌우된다"고 말한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보조금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 워싱턴DC는 행정수도의 물모델(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90년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사이 포토맥 강 북쪽을 수도로 정하면서 프랑스 건축가에게 도시 설계를 맡겼다. 새 수도 선포 후 실제 이전까지는 10년이 걸렸다. 그 사이 필라델피아를 임시 수도로 두고 도로 설계부터 건축까지 차근차근 진행했다. 하지만 새 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1800년 11월 17일 워싱턴DC에서 첫 의회가 열릴 때 국회의사당은 북쪽편만 완공된 상태였다. 당시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의회 연설에서 "지금 희망했던 것만큼 시설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이라며 의원들을 달래야 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3부 관청이 이전하면서 워싱턴DC는 차차 미국의 행정수도도 자리 잡았다. 지금은 174개국 대사관을 비롯해 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등지를 뜬 지구촌 정치·외교의 중심지가 됐다. 경제수도도 별도도 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브라질은 내륙 지역

이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를 워싱턴DC와 같은 행정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의회 연설에서 "지금 희망했던 것만큼 시설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이라며 의원들을 달래야 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3부 관청이 이전하면서 워싱턴DC는 차차 미국의 행정수도도 자리 잡았다. 지금은 174개국 대사관을 비롯해 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등지를 뜬 지구촌 정치·외교의 중심지가 됐다. 경제수도도 별도도 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브라질은 내륙 지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9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